기획시리즈 대학법인, 무엇이 문제인가

자율과 재정확보로 치유할 대학병

〈1〉 대학법인의 성격

얼마전 일어났던 일련의 대학입시부정은 교육계에까지 부정이 만연함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특히, 대학입격을 돈으로 사는 세태는 우리 사회의 물질만능주의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대학교육 재정의 부실함을 엿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로, 부정의 근본원인 되는 대학재단의 자율성 보장과 빈곤한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과 논의가 뒤따르고 있지만, 기여입학제 실시여부 논란등 근본적유책보다는 단기적인 미봉책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각 대학재단이 안고 있는 여러점(특히 사립대학의 재정난)과 그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註〉

우리의 헌법 제21조에는 모든 국민의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제31조 4항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치제를 보장하고 있다.

대학의 자치라 함은 대학이 대학구성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칭하며 대학의 인사, 교육,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 재정적 사항 및 대학의 관리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교수회를 중심으로 대학이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대학의 자치가 누구로부터의 자치인가를 의미하기도 한 것이기도 하다. 즉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해 설립된 국·공립대학에 있어서는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주성이, 그러나 사립대학법에 의거해 대학법인에 의하여 설치, 경영되는 사립대학에 있어서는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주성은 물론이고 대학 법인으로부터의 자주성이 대학 자치의 요소로 요청되고 있다.

그 결과인지 오늘날 특히나 많은 사립대학에서는 사립대학의 자치를 제약하는 법인의 성격문제로 대학 행정이 파행적으로 치닫고 있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창의적인 학문연구의 장이 되어야 할 대학이 그 본연의 자리매김을 해 나가는데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기도 하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학문연구를 보장하는 대학자치의 확보가 선결과제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대학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대학을 설립, 경영하는 대학법인으로부터 자유로와야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은 어떻게보면 역사적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의 획득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대학현실을 살펴볼 때 국가적 통제와 대학 법인으로부터의 자율성의 압박속에 그 나름의 숨을 쉬기에도 힘든 정도이다.

지난 90년 11월 교육계의 많은 반대속에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그 나름의 순수하고 좋은 의도의 조항도 있었다. 그러나 일부 부분에 있어 학교법인의 파행적인 행태는 더욱 부추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은 결코 그냥 넘어 갈 수 없는 사항이 문제였다.

개정법률속에서는 총·학장이 가지고 있던 대학의 교수, 직원의 임명 권한을 학교 법인에 넘겨 주어 교원 신분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이사장의 친인척이 총·학장이 될 수 있도록 했는가 하면 대학 법인의 이사중 친인척의 비율을 과거의 1/3에서 2/5로 상향 조정 했으며 이사장이 여러개의 법인 이사장을 겸할 수 있도록 허용, 대학 법인의 권한을 현저히 강화시킨 것이다.

대학의 설립자가 이사장인 대학법인은 대학발전의 주체로서 대학관리의 고유한 기능을 갖고 대학운영과 실제 권한은 대학의 총·학장을 통해 표현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대학법인 이사장의 책임은 총·학장을 지도, 보호하고 지원하며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역할이 주어져 있기도 하지만 이론적으로 총·학장은 대학 내부를 총괄하는 내부 책임자이며 이사장은 대학회부업무를 총괄하는 외부책임자로서 구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역할 구분이 제대로 실행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점을 극복하기 위해 법인은 건학이념을 유지하고 교육 환경 조성에 앞장서 육영사업을 통한 사회적 존경으로 보람을 느끼는 자세가 필요하며 교수등에 대한 임명권을 총·학장에게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학은 자유와 개방의 광장이다. 진리탐구와 인간형성의 양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은 스스로의 자율이 있어야 한다.

대학의 자율을 입버릇처럼 강조해 왔던 지난 6공 정권, 사회전반의 민주화 추세로 정부의 대학 통제는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학생정원의 책정, 학과신설, 행정조직(국립대)의 개편, 학칙개정, 학위등록등에 대한 통제는 여전하다. 이러한 정부의 대학에 대한 통제는 학교마다 특색없는 획일적인 대학을 만들어 학문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양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91년 현재 인구 1만명당 대학의 학생수는 4백7명으로 일본(88년 현재 2백12명), 영국(87년 1백91명)을 제치고 미국(88년 5백44명)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면에서의 평가는 발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위기를 맞고 있다. 91년 말 현재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핵심적 요소인 대학의 교수확보율은 전국 평균 71.1%, 사립대는 67.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교육현실의 낙후는 어디에서 기인되었을까. 국가와 대학과 사회가 사회발전과 학생수의 증가에 따른 교육시설의 확충과 연구환경의 시대적 변화조성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적 성장에 따른 질적으로 지속적인 교육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 대학은 만성적인 재정난에서 헤어나지 못해 교육의 질과 여건은 후진국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재정은 크게 등록금, 정부보조금, 재단 전입금(사립대), 기부금, 수익사업이익등으로 구성된다. 각 요소들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만 대학 재정은 건실해 진다. 대학교육의 75%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91년도 수입재원 구성비를 보면 등록금이 70~8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재단 전입금은 15%, 정부 보조금은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매년 재정난타개를 위하여 정부보조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공염불로만 그친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공교육비의 비중은 정부 예산의 20%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나 GNP대비는 3.3%에 불과해 선진국에 비해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학교육에 투자되는 공교육비는 전체교육예산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치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 대학교육이 파행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빈약한 재정에서 비롯된 만성적 투자부족으로 대학이 연구, 교육의 기본적 기능마저 수행해 가기 힘든 지경이라는 실토를 서슴지 않는다. 향후 10년만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대학은 더 이상 치유불능의 상태가 될것이라는 여견도 한다. 사립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는 현저히 국고지원을 사립대학재정의 10%이상으로 지원해야만이 대학은 다소나마 숨고를 틀 것이라 한다. 현행 교육부의 대학정책에 대한 사립대학의 정책자들은 심각한 불만을 표출한다. 입시등거의 모든 학교 행정에 관여 하면서 유독 재정문제에 있어선 국립과 사립의 형평을 잃은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학교육의 공적 개념을 유지하려면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지원 만큼 사립대학에서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대학교육이 고등교육으로 의무교육이 아닌이상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명제속에서 보면 수익자인 학생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의 기회균등적면으로서 이해는 달라지는 것이다. 학생이 1차적으로는 수익자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대학교육의 수익자는 국가와 민족인 것이다.

교육부 발표의 '90년도 전국 사립대학 재단 전입금 현황과 각 대학 예산중의 비율'에 의하면 사립 51개 종합대의 평균 재단 전입금 비율은 14.5%, 이중 10%미만은 32개교, 20% 미만 대학은 43개교를 기록, 재단 전입금이 학교 재정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재의 대학재정난은 크게는 정부의 지원금이 적다는 것이다. 한편 또하나 우리는 간과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그동안 대학이 스스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으며 또다른 수혜자인 기업도 대학에 대한 재정적 투자 및 연구환경조성을 외면해 왔다는 것이다.

사립대학의 재단 전입금은 규모나 대학전체 운영비에 대한 비율 면에선 정부 지원금만큼이나 미미한 실정으로 인해 일부 사학 재단은 교육을 볼모로 삼아 대학을 자산 증식과 재단 관계자들의 이익사업으로 이용되는 측면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에는 광운대등 10여개 대학에서 입시부정이 저질러져 또 한번 대학은 대국민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국립한 사회의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몇년전 부터 기여 입학제 시행에 대한 많은 논의도 나오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전향적인 사고속에서는 결코 대학은 진정한 발전보다는 원칙의 예외로 또다른 사회의 불안만 조성할지도 모른다.

대학법인의 역할과 임무는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데 있다. 대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일차적인 주체는 어디까지나 대학자체가 주체로서의 대학 구성원이며, 학교법인과 정부 당국은 어디까지나 조력자 내지 감독자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교육기관을 설립자가 사기업화 하거나 소수의 이익과 권위를 위해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사학의 공공성에 위배되는 것이며, 또한 정부당국은 대학을 관할함에 있어, 대학이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학의 기본적 바탕인 대학의 자주성은 결코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는 모두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헌법적 원리의 이해에서 바탕이 되는 결론인 것이다.

양적팽창 불구 정부·재단 지원 태부족
학생수 세계2위—사학 국고보조금 1%
고력자로서의 국가·법인 위상정립 시급

강단시론

황 문 수
〈문리대교수·철학〉

비판의 복권을 위하여

우리는 흔히 군사정권 또는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불리는, 정통성과 도덕성을 갖지 못한 정권 밑에서 박탈과 상실의 시대를 살아오고 있다. 우리가 박탈당하고 상실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과 정의, 비판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른바 문민정권이 탄생했다고 떠들석한 요즈음에 굳이 여기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을 사용하는 것은 문민정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부가 6공2기의 정권이 될 것인지, 또는 과거와 과감하게 단절하고 새로운 정권으로서의 김영삼정권이 될 것인지 아직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정권이 명칭상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6공2기의 정권에 지나지 않는 정권이 된다면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3·4·5·6공을 통해 형성된 기득권 세력의 영향밑에서 한 정권이 운영되는 경우, 현 정권이 내세우는 개혁은 수식어나 구호로 끝날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지금까지도 김영삼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려고 하는가를 잘 알지 못한다. 신한국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지만 그 신한국의 윤곽조차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김영삼대통령이 신한국 건설을 위해 치유하겠다고 하는 한국병이 대한 그의 진단도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 만일 부정·부패의 척결 등 그가 취임사에서 제시한 목표가 신한국의 모습이고 한국병에 대한 진단이라면, 그의 한국현실에 대한 인식은 매우 피상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참으로 건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박탈해가고 몰수해 버린 모든 권리를 되돌려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국민에게 원래 속해있던 것을 박탈하고 몰수함으로써 이른바 한국병이 심각해졌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서 개혁을 하지 않는 한, 그 개혁은 피상적이고, 대증요법적인 개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개혁은 문자 그대로 혁명적인 개혁이어야 한다. 대증요법에 의해서는 회복될 수 없는 것이 한국병이다.

이러한 한국병을 치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되돌려 받아야 할 것은 많다. 그러나 여기서는 비판의 반환만을 말하려고 한다. 비판이 감금된 사회속에서 그 사회가 지금까지는 없던 생기와 활력을 갖고 새로운 사회로 변화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문민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문민정부에 바라는 말을 듣는 어느 TV 프로에서 한 저명한 영화배우는 우선 표현의 자유의 회복을 말했다. 그는 영화를 만들면서 이것이 과연 말썽이 없을까를 걱정하는 풍토의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이것은 작은 예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서 비판이 얼마나 억압받고 봉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잔잔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이보다 더 극단적인 예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여기서 새삼스럽게 되풀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적어도 5·16쿠데타 이후 이 나라에서 비판을 말살하려는 사람들의 목적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비판은 회피하거나 기피해야 할 일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체질화되어서 비판부재의 시대가 상당한 기간 지속되어 왔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기주의의 만연도 비판을 기피하는 풍토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되고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침묵이 미덕으로 생각되는 사회에서, 그리고 어떤 비판도 받지 않고 부정한 수단으로 명예든, 재산이든 쉽게, 곧 독재적인 집권자의 의지에 거슬리지 않는 한, 획득될 수 있는 사회에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발생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오래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비판이 봉쇄되어 있는 사회는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물과 같이서 정체되고 부패하기 마련이다. 비판이 봉쇄되고 억압받는 사회가 활기를 되찾고 발전의 희만을 갖기 위해서는 원래가 국민 각자의 고유한 권리인 비판의 무제한한 자유가 반환되어야 한다. 비판의 자유는 적어도 민주국가라고 자처하는 나라에서는 정부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고유한 권리이며, 정부는 오히려 국민의 비판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비판의 자유는 터무니 없는 비난이나 이른바 음해의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참으로 정당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건전해야 하며, 정의로와야 한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비판의 부재가 불합리한 비난, 잔꾀로 가득찬 음해가 마치 비판인 것처럼 날뛰게 한 원인인 것이다.

무제한한 비판의 자유라는 말에는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언제가 개방사회를 주제로 하는 TV토론에 참여해서 진정한 개방사회는 그 사회의 기본적인 틀(체계)까지를 비판할 자유가 허용되는 사회여야 한다고 말언했다가 주제 발표자로부터 공개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비난을 받은 기억이 있다. 그러나 일정한 한계를 정해놓고 그 한계 안에서는 어떤 비판을 해도 좋다고 하는 비판의 자유는 상대적인 자유일 수는 있어도, 절대적인 자유는 아니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비판의 자유는 기성체제의 기본적 틀을 비판하고,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 붕괴시키려고 하는 비판까지도 가능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일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체제가 역사적 당위성을 가진 체제라면, 그 체제에 부정적인 비판조차도 수용하고, 견뎌내고, 반박하는 것을 통해서 그 체제의 역동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비판이 억압된 상태에서 체제의 우월성을 소리 높이 외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와 다름없는 것이다. 그 체제, 그 사회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이겨내는 것은 바로 그 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고, 또한 그 체제가 정체되고 폐쇄적인 체제가 아니라, 역동성을 갖춘 발전의 모체가 될 수 있다는 역력한 증거인 것이다.

한국병의 퇴치를 장담하는 현 정권은 과연 비판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 무척 궁금하다. 비판에 대해 관용을 베푼다는 자세라면 사회의 변화에 쫓기며 뒤따라 가기위해 허덕이는 정권일 것이고, 무제한한 비판을 국민의 권리고 인정하고 겸허하게 역사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라면 진정한 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역할을 담당하려는 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무제한한 비판의 자유를 국민에게 반환하는 일이 개혁의 첫번째 과제이고, 진정한 개혁의 전제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있는가 라고 김영삼대통령께 묻고 싶다.

또한 사학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학은 부단한 자기 개발과 대학교육의 기획발휘로 대학교육재원확보에 지속적인 노력과 건강한 학풍조성에도 많은 사업을 꾸려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인과 정부의 일차적인 임무는 함께 대학사회의 발전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 요컨데 대학법인과 정부당국과의 관계는 대학 자율성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성과 자주성을 위해 상호 견제 하면서 조화를 모색하여야 할 입장인 듯시에, 대학발전을 위한 대학의 질적 양적인 발전의 병합 그리고 이에 수반될 재정 확보에 공동의 책임을 지는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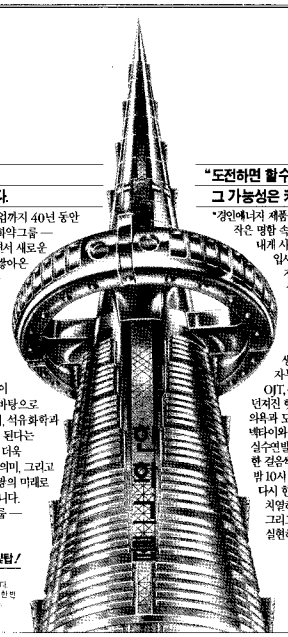
〈기획부〉

한국화약그룹의 새이름 —
한화그룹과 함께!

한화그룹—
한국화약그룹의 새이름입니다.

국가의 기간산업에서 창단에너지산업까지 40년 동안 묵묵히 우리와 함께 성장해온 한국화약그룹 — 이제 새이름 한화그룹으로 출발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다짐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힘과 지력을 바탕으로 대내적으로는 5대 정신덕목과 PRO-2000운동, 대외적으로는 국제화 전략과 ECO-2000운동을 실천, 다가올 21세기에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힘찬 도약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국화약그룹의 새이름 한화 — 새이름 한화의 화에는 4가지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화약산업의 전통을 바탕으로 민족저력을 재창조한다는 火의 의미, 석유화학과 에너지산업으로 우리 경제의 골격이 된다는 化의 의미, 산업의 조화와 균형으로 더욱 아름로운 사회를 창조한다는 和의 의미,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바탕으로 번영과 영광의 미래로 나아간다는 華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의지의 한화그룹 — 한화그룹과 함께 하십시오./

한화그룹이 건립하는 '93 EXPO 한빛탑!
한화그룹은 한국화약그룹의 새이름입니다.
한화그룹은 '93 대전 EXPO 한빛탑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 한빛탑은 구세기 세계 속의 한국인의 양심을 다시 한 번 울리우는 범국민적 여망과 의지 를 담은 기념탑입니다.



"도전하면 할수록,
그 가능성은 커지게 마련일 것이다./"

"경인에너지 제품 연구팀 연구원 김대원 —"
작은 명함 속에 박혀있는 깨알같은 글씨들이 새삼스레 내게 사회인이라는 실감을 던져준다.
입사 2개월의 신입사원—돌이켜 보면 정신없이 지나간 날들이었다. 어쩌면 "학생 김대원"으로 살아온 삼수년간의 삶에서 보다 더 많은 일들이 지난 1년 사이에 일어난 것만 같다. 비교적 평탄한 성적 덕분에 한화그룹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4학년때의 생활. 입사 동기들과의 우정과 한화인의 자부심으로 가슴 뿌듯했던 그룹연수, OJT, 부서배치 … "한화"라는 커다란 조직 앞에 던져진 햇병아리에겐 모두가 새로움이었고 아울러 의욕과 도전의 연속이었다. 어색하기만 했던 백타이와 양복에도 이젠 제법 익숙해지고, 실수연발의 과정에서도 내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이 한 걸음씩 가능성으로 다가오는 느낌이다.
밤 10시 — 까지지 않는 연구실 불빛 아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다져본다.
처절하게 도전하는 자에게만 길이 열리고, 그리고 그 길이 바로 내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

'92학년도 한화그룹 장학생 출신
김 대 원
●경희대 화학공학과 '93년 2월 졸업
●경인에너지 인천종장 제품연구팀 근무

■ 화학부문 ●(주)한화 ●한양화학(주) ●한양소재(주) ●한양바스프우레탄(주) ●(주)유니온 포리미 ■ 에너지부문 ●경인에너지(주) ■ 무역부문 ●골든벨상사(주) ■ 기계/전자부문 ●한국종합기계(주) ●한국정밀(주) ●한국자동차부품(주) ●동양전자통신(주) ■ 금융부문 ●제일증권(주) ●(주)제일경제연구소 ●제일투자자문(주) ●삼희투자금융(주) ■ 유통/레저부문 ●태창개발(주)(서울프라자호텔) ●(주)한양유통 ●서울힘랑라이사(주) ●한국국토개발(주) ■ 사회복지부문 ●천안복일학원 ●(주)빙그레 이글스 ■ 언론부문 ●(주)경향신문사 ■ 연구부문 ●한화그룹 종합연구소